

시민감사음부즈만 감사건 2배 ↑

서울시

시민권리 침해 사항, 조정·중재
주민·직권 감사 등 15건 완료
“청구인 면담 등 소통 강화예정”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시민의 눈으로 서울 시정을 감사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음부즈만위원회의 감사 건수가 최근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감사음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주민감사 2건, 시민감사 8건, 직권감사 5건 등 총 15건의 감사를 완료했다. 전년 8건과 비교해 88% 늘었다.

시민감사음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시, 자치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 권리를 침해받은 사항 등을 조사해 조정·중재한다.

위원회는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장애인콜택시 스티커 부착 관리 소홀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적정성 ▲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절 ▲강동구 고덕4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테니스장 이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처리한 은평구청에는 신분상주의(5건), 장애인콜택시 부착광고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는 기관주의(1건)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부적절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로 감리용역비를 과소 책정하게 만들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약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일을 초래해 기관주의(1건)와 심사결과 검증과정 보완과 이의제기 절차 신설 권고(1건)를 받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과 관련해 단독 주택용지 중 일부가 특정인과의 수의계약을 위해 과소필지로 부적절하게 분할된 사실이 적발돼 개선요구(1건), 신분상 조치(훈계 2건, 기관경고(1건) 통보를 받았다.

위원회는 또 허위 소음 민원 때문에

강동구청이 강동테니스장을 명일근린공원에서 능골근린공원으로 옮기는 것은 체육시설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민원을 접수해 행정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 강동구청은 체육시설법, 공원녹지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2018년 17건에서 작년 45건으로 28건 증가했고 신분상 조치는 전년 4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11건 늘었다”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 업무 관련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시민 권익을 제고하고자 청구인과 수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였는데, 감사 청구 목적이 피감기관의 행정행위 취소인 경우 감사 결과가 이를 인용하지 못하면 모든 항목의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향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 기간 중 청구인 면담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감사 진행 방향과 결과에 대해 자세히 사전 안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아찔한’ 롯데월드타워 외벽청소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20층에서 전문 작업자들이 외벽 유리창을 닦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서울시, 마곡지구서 4차산업 신기술 실증

비대면 헬스케어 등 5개 기술

서울시는 첨단기술 연구개발 산업단지인 마곡지구에서 4차산업 관련 5개 기술 실증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5개 프로젝트 중 마곡지역 거주자·직장인 대상 비대면 근골격계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참여자가 측정기기를 사용하면 인공지능(AI)이 건강상태 빅데이터를 분석해 근골격계 위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에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챗봇은 IoT 센서가 미세먼지와 소음 등 환경정보를 수집한 뒤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외에 비고정형 공유 전기자전거 시스템, 스마트 분리배출 솔루션, 자전거·킥보드 충전과 공유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스마트 스테이션’ 등도 있다.

시는 이를 수행하는 5개 기업에 각



비대면 헬스케어. /서울시

7000만원가량 지원하고, 마곡지구 내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6~12월 실증 시험장으로 제공한다.

프로젝트 수행 업체들은 시민 참여자를 모집해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마곡 지역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진정한 테스트베드”라며 “4차산업 기술 실증에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시내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개편

무료와이파이·공기청정기 등 탑재 IoT 기반 ‘자동정차시스템’ 도입

서울의 버스정류소가 무료와이파이와 휴대전화 충전기, 공기청정기를 탑재한 미래형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내 버스정류소를 각종 ICT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쉘터’(Smart Shelter)로 전면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형 버스정류소인 스마트쉘터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할 만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와 온열의자, 무료 와이파이 등을 갖추게 된다.

천정형 공기청정기와 실내외 공기질 측정기, 외부 공기 유입을 막아주는 에어커튼,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을 설치해 깨끗한 공기 질을 유지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고 시는 설명했다.



스마트쉘터 디자인 시안 중 하나인 ‘한국의 미(美)’. /서울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TV(CCTV), 비상벨, 심장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고 안전손잡이, 음성안내 등 교통약자 배려 시설도 생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빈 곳을 감지해 도착 예정인 버스의 정차 위치를 지정, 운전사와 대기승객에게 안내하는 ‘자동정차시스템’이 도입되고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도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런 스마트쉘터를 올해

10월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10곳에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시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로 확대한다.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가로변의 일반 정류소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몇몇 해외 도시에서 냉난방, 녹화 등 특정 기능을 도입한 버스정류소를 선보인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은 세계 최초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1인 가구 청년 5000명 월세 지원

월세 20만원, 최장 10개월간 지급

서울시는 올해 1인 가구 청년 5000명에게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 이하다.

다만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재산 총액이나 소유 차량 시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공공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도 제외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5000명 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을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으로 이름이 붙은 이 사업은 독립생활의 출발선에 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안전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운전면허시험장, ‘전면예약제’ 도입… 토요특별근무 적용

도로교통공단

13일부터 일부 시험장 토요근무 재개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13일 토요일부터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를 도입해 토요특별근무를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운영하던 토요특별근무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중단했었다.

이에 따라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9시~13시 중 방문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예약자에 한해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토요일에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운

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는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한용수 기자 hys@

50플러스재단, 비대면 프리랜서 활동비 지급

서울시 50~67세 중장년층 50명 심사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비대면 프리랜서 활동’을 하려는 중장년층 약 50명에게 심사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50+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만 50~67세의 서울시민을 의미한다.

재단은 50+프리랜서가 활동분야를 온라인 강의·공연, 출판 등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